

#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

심 재 호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 문제의 제기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의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역동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경험하기도 했다. 우리의 주요 관심영역인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해서 새정부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이 상당 부분 현실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것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졌으나, 5년이 지날 즈음에는 그 기대가 제대로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YS정부에서 '삶의 질 세계화'가 제시되기는 했으나 국가중심의 복지체제를 확장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고, 결과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됨으로써 '삶의 질 황폐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어서 등장한 DJ정부는 실업해소 등 경제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는데, '생산적' 복지를 주요 정책이념으로 설정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상당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결과 사회보험의 적용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등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DJ정부 하에서 보건복지 예산은 상당한 증가 추이를 보였다. 보건복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8년 이래 5년간 23%로서 이것은 국가 재정규모의 연평균 증가율(9.5%)에 비하여 2배 이상이나 높은 것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1998년에 3조 1,127억원으로 국가재정의 3.9%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7조 7,495억원으로 국가재정의 6.9%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물론 이 수준은 OECD국가들에 비해서는 극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라고 부르기에에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보건복지에 대한 예산지출을 꾸준하게 노력한 점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DJ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sup>1)</sup> 복지국가의 사회적 기반이

---

1) 생산적 복지의 성격 또는 DJ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 속에서 엇갈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연명 편(2002)을 참조하기 바람.

매우 취약한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생산적 복지론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은 적어도 '상징적으로는' 복지정책의 일보 전진<sup>2)</sup>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조영훈, 2002: 86). 그러나 생산적 복지는 저소득층을 주요 표적으로 하여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게 됨으로써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를 구현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정부는 '참여복지와 삶의질 향상'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새정부는 DJ정부가 IMF위기 극복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었으나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에 치중되어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미흡하였다고 평가하고, 새정부가 추진할 중점과제로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대책 추진', '차상위계층까지 기초생활보장 확대', '사회복지인프라 확대 개편'을 설정하고 있다.<sup>3)</sup> 아직까지 참여복지의 개념규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문제로 남아 있지만, 사회복지공약을 볼 때에 일단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발표주체의 기획의도에 따라 새정부가 실현해야 할 사회복지정책 과제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할 정책과제와 바람직한 실천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앞으로 나타날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살펴보고 선거과정에서 국민에게 제시한 노무현대통령의 사회복지정책공약에 대한 평가와 이를 실현해야 할 새정부의 정책과제를 모색해 보자 한다.

## 2. 새정부의 사회경제적 환경 : 가족변화와 인구고령화를 중심으로

### 1) 가족의 변화양상

최근까지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가족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주기의 변화, 가족세대의 단순화, 한부모 가족이나 독신가구와 같은 비정형적인 가족형태의 증가 등 구조상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김성천, 2001).

첫째,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1975년에 가구원의 수가 5.0명에서 2000년 3.1명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출산율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평균 가구원 수의 변화는 가족세대의 단순화 및 핵가족의 증대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이 감소되면 가족이 담당해 온 보호 기능이 약화되어서 아동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이 가족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게 된다.

2) 예를 들어, 생계비 지원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최저생활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복지권 혹은 사회권을 보장하고자 하였고, 사회보험제도의 확충과 내실화를 시도한 점이다. 그런데, 조영훈이 '일보 전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생산적 복지는 결국 잔여적 유형의 복지국가로 재구성해 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3) 기타 추진과제로서 국민연금제도 개선 및 기금관리 내실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안정된 생활보장, 노인과 아동 등 가족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 및 가족지원 종합대책」 마련, 사회복지 시설 균형발전 대책 등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가족주기가 변화하고 있다. 결혼연령의 상승, 자녀출산의 저하, 자녀 터울의 단축,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기는 짧아지고 자녀들을 결혼시킨 후 노인부부 또는 여성노인 혼자 남는 '빈둥지 시기'는 점차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가족 세대가 단순화되고 있다. 가구형태별 구성비를 보면 2000년에 2세대 가구가 72.9%로 가장 많았으며, 1세대 가구는 17.1%, 3세대 가구는 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과거와 비교해 볼 때 1세대 가구가 증가하고 3세대 이상의 가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족 세대가 단순화되는 경향은 가족에 의한 노인과 아동의 보호가 점차 어려워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가구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1인 가구의 증가, 부부가족의 증가, 3세대 이상 가족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2세대 가구는 큰 변화가 없으나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인 가구의 비율은 1975년 4.2%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9.0%, 2000년 15.5%로 나타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 중에서 보다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가구는 노인단독 가구인데, 지난 5년간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세대 가구는 1980년 8.8%에서 1990년에 12.0%로, 2000년에 17.1%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sup>4)</sup>

<표 1> 가구원수 및 세대수별 분포 : 1975~2000년

	가구원 분포(%)						세대수별 분포(%)				
	일반가구 (천가구)	가구원수별				평균 가구 원수	혈연가구 (천가구)	세대수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세 대	2세 대	3세 대	4세대 +
1975	6,648	4.2	8.3	12.3	75.1	5.0	6,367	7.0	71.9	20.1	1.0
1980	7,969	4.8	10.5	14.5	70.1	4.5	7,470	8.8	73.1	17.6	0.6
1985	9,571	6.9	12.3	16.5	64.3	4.1	8,751	10.5	73.3	15.8	0.5
1990	11,355	9.0	13.8	19.1	58.1	3.7	10,167	12.0	74.1	13.6	0.3
1995	12,958	12.7	16.9	20.3	50.1	3.3	11,133	14.7	73.7	11.4	0.2
2000	14,312	15.5	19.1	20.9	44.5	3.1	11,928	17.1	72.9	9.9	0.2

자료 : 통계청, 2002 한국의 사회지표

다섯째, 이혼증가로 인한 재혼가족 및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율은 1980년에 5.8%에서 1995년에 16.8%, 2000년에 35.9%로 급증하고 있다. 이혼시기를 보면 결혼 초기뿐만 아니라 황혼기 이혼율도 높아져 이혼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재혼도 증가하고 있다. 즉, 초혼의 비율이

4) 이러한 1세대 가족의 증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첫째, 가족형성 규범의 변화로 무자녀 가족의 증가와 결혼 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둘째, 성인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노인부부만이 남게 되는 경우이다.

1971년에는 전체 혼인의 94.4%에 달했으나 2000년에는 82.0%로 줄어들고 그만큼 재혼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여성 가구주가 증가하고 있다. 가구주의 성별 비율을 보면 2001년에 여성 가구주가 19.5%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 중에서 가구주인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는데,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의 경우에 유배우 여성의 51.6%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최근까지 가족은 구조와 형태면에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가족의 보호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인구고령화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와 관련된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인구고령화이다. 통계청(2001)에서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는 2000년 현재 약 4,700만명이며, 2013년에 5,000만명을 돌파하고, 현재와 같은 저출산 수준이 지속되면 2023년에 5,068만 3천명을 정점으로 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그 결과 2030년에는 5,029만 6천명, 그리고 2050년에는 4,433만 7천명으로 감소하여 1990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2000년에 339만 5천명(7.2%)에서 2019년에는 731만 4천명(14.4%)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 데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40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115년이나 소요되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일본도 24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노년부양비는 <표 2>에서 보듯이 2000년에 10.1에서 2010년에 14.8, 그리고 2030년에는 35.7로 증가하여 노년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은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즉, 2000년 현재에는 생산가능인구 9.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4.7명이 1명의 노인을, 그리고 2030년에는 2.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구조를 가지게 되어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sup>5)</sup>

5) 다만,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9년까지는 총부양비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2000년에는 유년부양비가 29.4이고 노년부양비는 10.1로 이를 합한 총부양비는 39.5인데, 2019년에는 유년부양비가 19.8, 노년부양비가 20.2로 이를 합한 총부양비가 40.0로 비슷한 규모를 보이게 된다.

〈표 2〉 부양비의 변화 추이(1970~2050년)

연도	유소년 부양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노령화지수	노인 1명당 부양자수
1970	78.2	5.7	83.9	7.2	17.7
1980	54.6	6.1	60.7	11.2	16.3
1990	36.9	7.4	44.3	20.0	13.5
2000	29.4	10.1	39.5	34.3	9.9
2010	23.9	14.8	38.8	62.0	6.7
2020	19.6	21.3	40.9	109.0	4.7
2030	19.1	35.7	54.9	186.6	2.8
2040	19.6	51.6	71.2	263.2	1.9
2050	19.0	62.5	81.6	328.4	1.6

이러한 양적 변화와 더불어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노후준비와 관련해서는 현 노인세대의 경우 42.8%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어서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을 통한 노후준비는 매우 미흡하였는데, 예금·적금·저축성 보험이 15.3%로 가장 높았고 공적 연금에 가입해 있는 노인은 13.1%이고 사적연금은 5.1%, 퇴직금은 2.0%로 매우 낮았다.

### 3) 기타 : 장애인의 특성과 문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2002년에 125만 6천명인데, 이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58.6%, 시각장애인이 10.4%, 청각·언어장애인이 9.5%, 정신지체 장애인이 8.1%, 뇌병변 장애인이 6.8%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매·알코올중독 등 실질적인 장애를 포함할 경우 장애인구는 약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변용찬 외, 2001), 장애인의 89.4%가 예방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이고, 재가 장애인이 96.5%이며, 40세 이상이 72.8%로 나타났다. 장애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50.3%이고, 여성 장애인은 32.3%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약 61.0%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9.0%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은 특히 발달장애(82.1%), 뇌병변장애(74.7%), 정신장애(62.2%)를 가진 장애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실태를 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2만원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장애인의 60.3%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이 월평균 약 16만원인 것으로 나타나서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28.4%로서 이는 전체 실업률(2000년 6월) 4.2%에 비해 약 7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고, 장애인의 취업 분야는 주로 농업(25.6%), 단순노무직(23.4%), 서비스업(21.0%)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취업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79.2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재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생계보장(30.3%)과

의료혜택 확대(25.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책방향을 예방적 서비스 체계와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인구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후치료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 제공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잔여적 복지모형에서 벗어나 제도적 복지모형을 강화하도록 해야 하며,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주의적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3. 사회복지공약평가와 새정부의 정책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1)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정책공약의 주요 내용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은 대통령 후보와 소속정당이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에게 제시한 모든 약속을 말한다. 이러한 선거공약은 그 표현형식과 내용은 서로 다르더라도, 대통령의 위상과 권력을 고려하면 정책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허범, 1997:15~16). 첫째,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은 정당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정책(즉, 정당정책)이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정책(즉, 정부정책)은 아니다. 둘째, 그렇지만 정권당과 정부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 대통령의 공약이란 점에서 대부분 공식적인 정부의 제로 전환된다. 셋째, 당선한 후보의 정책공약이 바로 공식적인 정부정책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원천을 조성하여 준다. 다섯째,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은 정부인수의 수단이 된다. 여섯째, 정책공약은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정치적 수사로 단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항상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 중에서 선거공약이 공식적인 정부의제로 전환되어 정부정책으로 채택되고 정부인수의 수단이 되지만, 정치적 수사로 단장되어 있어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선거공약의 의미와 정책과제를 검토하는 데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즉, 선거공약이 구체적인 국가정책으로 탈바꿈하여 현실화되기는 하지만, 공약 자체가 정치적 수사로 표현되어 있다면 정책수립 과정에서 특정한 공약이 배제될 수도 있고,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내용이 공약에서 제시된 수준과 차이가 발생된다면 공약의 실현 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하여 '참여복지시대의 개막'이라는 타이틀 하에서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 실현, 저소득 국민의 인간적 생활보장, 각 분야별 참여복지 종합계획 수립,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론적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확충과 각 분야별 '사회복지 종합 발전계획'의 수립과 5년 내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수준 확립, 사회복지 지출비를 GDP 대비 10%에서 13.5% 수준까지 확대, 복지시설 균형 배치 및 복지전달체계의

기능 및 역할조정, 고령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 수준향상 등이 제시되어 있다.<sup>6)</sup> 이러한 총론 하에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 및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공약을 그 성격에 따라 법률제정 및 개정, 조직·기구의 신설 및 개편, 현금급여 및 서비스 확대, 시설확대 및 기능 강화,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 (1) 노인복지 서비스

노인복지 서비스의 정책공약은 <표 3>에서 보듯이 29개 사항이 제시되고 있는데, 중점<sup>7)</sup>을 두고 있는 것은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노인 경로연금 확대, 노인 요양시설 대폭 확대, 노인의 평생교육 실현 등으로 보인다.

노무현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정책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법률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장기요양보호에관한특별법」 제정이 주목을 끈다. 이 법률들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응책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현금급여 및 서비스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서 경로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확대(수급권자 월 10만원, 일반 월 5만원), 고령자의 기준 고용률 3%→6%로 상향 조정, 2007년까지 고령자를 위한 5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의 대폭 확대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구체적인 목표수치가 제시되어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50만개라는 수치는 상당히 과장된 목표치로 보이며, CSC의 경우에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둘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것에 국한한다면 자활공동체와 중복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시설확대 및 기능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급성병상의 요양병상 전환을 지원하여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충과 가족친화형 요양병상의 확보(‘소규모 중간요양시설’, ‘전원형 중간요양시설’ 개설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공약이라고 판단되지만 시설공급만 언급되어 있을 뿐 시설이용자의 부담완화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보여 바람직한 공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발표자가 보기에 이러한 공약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실시와 공적 노인요양 보호제도 도입 검토라는 부분이다. 노인요양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0년 2월에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발족하여 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을 논의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장기요양보험의 형태와 서비스 종류, 제공방식, 재원조달, 시행시기 등을 종합

6) 이 외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시·군·구청내 사회복지 전담부서(사회복지 사무소) 확대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전문성을 제고,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복지시설 종합대책을 수립, ‘미신고 복지 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있다.

7) 노무현대통령(후보)의 공약자료에는 중점공약이라고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각 분야별로 3~4개의 공약이 대표로 제시되어 있다.

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후에 2002년 7월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주관으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10월에는 그 실행계획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2003년 3월에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2004년까지 우리실정에 맞는 공적노인요양보장 실행모형을 개발할 계획이고 2005~2006년 동안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등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표 3〉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공약

분야	구분	공약내용
노인 복지	법률제정 및 개정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장기요양보호에관한특별법」,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제·개정 - 노인복지 용품 연구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 마련
	조직·기구 의 신설 및 개편	-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 보건복지부 노인담당 부서 확대, 개편 - 「고령자 인력관리센터」 설립
	현금급여 및 서비스 확대	- 「노인요양 보험제도」 시범실시, 공적 노인요양 보호제도 도입 검토 - 경로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확대 (수급권자 월 10만원, 일반 월 5만원) - 고령자의 기준 고용률 3%→6%로 상향 조정 - 고령자 틈새시장을 적극 개발하여 2007년까지 5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을 대폭 확대 - 틀니, 보청기 등 노인보장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건강검진 수가를 현실화하여 건강검진 제도를 내실화 - 평생교육센터, 문화센터 등에 교육비 할인(무료) 추진 - 노인양성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 - 노인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 노인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 노인교실, 노인대학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교육프로그램 개발 - 노인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과 교육 체계 확대
	시설확대 및 기능 강화	- 급성병상의 요양병상 전환을 지원하여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충 - 가족친화형 요양병상을 확보(소규모중간요양시설, '전원형중간요양시설' 개설지원) - 노인병 전문의 신설 및 종합병원의 노인병 전문과목 개설 - 요양병원 입원 수가의 합리화와 국공립 병원에 노인병상 확보 의무화 - 「호스피스센터」 설치 지원 및 「가정간호센터」를 활성화 - 보건소내 치매상담센터를 「노인보건센터」로 확대 -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센터」로 발전 - 노인 부양 가정에 대한 중형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세금감면제도 등 지원 확대 - 종합 실버타운 건립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기타	- 노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보상제도 체계화 - 국민연금 사각지대 최소화	

이러한 과정에서 새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호 방식으로서 '보험방식'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인요양보호제도로써 보험방식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보험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노·사·정 삼자의 보험료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정조달 방식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시설과 인력 등 전달체계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정비가 불충분하다면 '보험은 있으나 요양은 없는' 상태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3~4년 내에 노인요양보호 서비스



의 공급기반을 획기적으로 증설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2) 장애인복지 서비스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정책공약은 <표 4>에서 보듯이 42개 사항이 제시되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장애아동 무상보육 실시, 이동권·정보접근권·노동권 보장 등으로 보인다.

<표 4> 장애인복지 서비스 정책공약

분야	구분	공약내용
장애인복지	법률 제정 및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차별금지및적극적장애인관련특별법」을 제정</li> <li>-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한 상설기구를 운영</li> </ul>
	현금 급여 및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등록을 적극적으로 확대</li> <li>- 장애인연금제도 도입</li> <li>-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현실화, 대상 확대</li> <li>- 장애인 이동 비용의 현금급여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 차별을 해소</li> <li>- 저소득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li> <li>- 장애인 자립지원 종합대책 마련,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강화</li> <li>- 국민임대 주택의 5% 이상을 장애인 가구에 우선 배정</li> <li>- 공동생활 가정의 입소 기준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li> <li>- 2003년부터 취약전 장애아동의 무상보육을 시행</li> <li>- 특수교육을 점진적으로 공공무상화, 재활·직업교육을 강화</li> <li>-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확대, 점자·음성 안내, 캡션방송, 수화통역사 배치를 확대</li> <li>- 청각장애인 전화중계서비스,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자막지원센터 설립을 지원</li> <li>-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장애인 관련 급여항목을 확대</li> <li>- 3년 이내에 의무고용 2% 준수 완료</li> <li>- 장애인의무고용 제외 직종의 축소, 의무고용 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li> <li>-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훈련 실시, 생산적인 자활 지원책 마련</li> <li>- 출산·육아 도우미 지원, 고용확대 방안 등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li> <li>- 장애인 이동권 확보 종합대책 수립</li> <li>- 신설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이미 건설된 곳은 연차적으로 설치)</li> <li>- 천연가스버스 교체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저상버스 도입</li> <li>- 장애인 콜 택시, 장애인 이동센터 등 특별 교통수단을 확대</li> </ul>
	시설 확대 및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관, 주·단기 보호센터, 장애인 체육관, 재활병원 등을 확대</li> <li>- 장애아동 치료 및 특수교육 시설 확대</li> <li>- 장애인의 생활시설을 공동생활 가정(그룹 홈) 형태로 전환</li> <li>- 장애인단체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지원</li> <li>- 광역시에 재활 전문병원의 설립을 추진, 시군구에 중소 규모의 요양병원을 확대</li> <li>- 장애인관련 전문간호사 육성과 각종 의료기사의 종류를 확대</li> <li>- 특수교사·전문교사·전문치료사, 특수교육 보조원 등을 확대 배치, 교원 처우 개선</li> <li>- 일반 및 특수학교와 학급에 보조교사 혹은 도우미를 확대배치</li> <li>- 장애인의 생활체육 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li> </ul>

분야	구분	공약내용
장애인 복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고용업체에 인센티브 확대</li> <li>- 창업자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자영업 장애인을 적극 지원</li> <li>-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제도를 확대</li> <li>- 민간병원의 장애인 관련 수가를 적정화, 투자 재원을 국가가 지원</li> <li>- 장애인의 범주와 특수 교육에 관한 기준을 재조정</li> <li>-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인원을 축소</li> <li>- 특수교육기관을 장애유형별·지역별로 균형 배치</li> <li>-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정보 격차를 최소화</li> <li>- 대학별 평가제에 장애인의 교육시설 접근성 항목을 추가</li> <li>- 장애인 필수 의약품과 장애인관련 보장구 등의 생산을 장려, 품질개선 생산과 연구 지원</li> </ul>

노무현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정책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법률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적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등 모든 유형의 사회적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 현금급여 및 서비스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연금의 도입시기와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서 이것이 기존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수당제도를 확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별개로 새롭게 보편적인 무기여 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의무고용 2% 준수를 완료하고, 장애인의무고용 제외 직종을 축소하고 의무고용 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이슈화된 바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공약이며 이 공약에 따라 수립될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시설확대 및 기능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주간 및 단기 보호센터·장애인복지관·장애인 체육관·재활병원의 확대, 장애아동 치료 및 특수교육 시설의 확대는 재가장애인을 위하여 다양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공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특수교육은 현재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추정되는 장애아동의 절반 정도 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장애인복지분야의 공약은 42개가 제시되어 있지만 상당수의 공약이 지원확대 또는 지원강화 등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실현한다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은 문제이다. 그렇지만 장애인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2003년 2월에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에 기초하여 이 계획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아동 및 청소년복지 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복지 분야의 정책공약은 <표 5>에서 보듯이 24개 사항이 제시되고 있으며,<sup>8)</sup> 이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참여확대, 청소년 보호정책 강화, 어린이 보호 등이다.

노무현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복지 서비스의 정책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금급여 및 서비스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미혼부모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학교사회사업제도를 확대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사회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아닌 '청소년상담사와 학교를 연결하는 사회사업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학교사회사업의 기반을 구축해 온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표 5> 아동 및 청소년복지 서비스 정책공약

분야	구분	공약내용
아동 및 청 소년복 지	조직·기 구의 신설	-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마련
	현금급여 및 서비스 확대	- 저소득 한부모 가정, 미혼부모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확대 - 입양가정 경비 지원 및 입양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요보호 아동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확대 - 가정위탁제도 확대, 양육가정에 양육비를 지원 현실화 - 선진국형의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을 도입, 고유한 수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 - 청소년상담사와 학교를 연결하는 '사회사업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설 확대 및 기능 강 화	- 확대 아동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을 확대, 가해자의 치료 및 상담을 의무화 - 아동 상담과 치료센터를 확대 -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를 지원 육성 - 가출청소년에게 상담, 숙식, 심리치료,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 쉼터를 확대 - 아동 일시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 확대

8) 이 외에도 청소년 체육 등 사회복지 영역으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분야	구분	공약내용
아동 및 청소년복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5일 수업에 대비하여 다양한 문화, 체육, 봉사, 예술활동의 여건 확대</li> <li>- 선거연령을 국제 기준에 맞게 만 18세로 조정</li> <li>-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li> <li>- 청소년 육성·보호·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li> <li>- 청소년기금의 조성과 지원을 대폭 확대, 다양한 수련활동 인프라 구축</li> <li>- 청소년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li> <li>- 청소년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li> <li>-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당한 노동행위 감시</li> <li>- 학교 주변(school zone) 속도제한 강화</li> <li>- 미아찾기 시스템을 개선</li> <li>- 장애 아동의 조기발견·조기치료 체계를 강화</li> <li>- 협의이혼시 자녀 부양에 대한 협의사항 제출을 의무화</li> </ul>

다음으로 시설확대 및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학대아동 전문기관의 확대와 가해자의 치료 및 상담의 의무화, 아동상담과 치료센터의 확대, 청소년쉼터의 확대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아동학대 문제나 학교청소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적절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아동 및 청소년복지 분야의 정책공약은 종합적으로 볼 때에 공약의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적어서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공약들 중에는 ‘방안 강구’ 또는 ‘대책 강구’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정책공약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4) 여성복지 서비스

여성복지 분야의 정책공약은 <표 6>에서 보듯이 48개<sup>9)</sup>가 제시되고 있는데, 보육료 절반 국고 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과 고용평등, 여성대표성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여성복지 분야의 정책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법률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현재의 남녀고용평등법을 포괄적인 고용차별금지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가족간호휴가제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현금급여 및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는 각 가정의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차등보육료제를 도입,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을 실시,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한다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보육사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9) 공약자료집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여성분야 공약의 경우에는 여성과학자 정책 등 사회복지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약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사회복지의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만 고려한 것이다.

〈표 6〉 여성복지 서비스 정책공약

분야	구분	공약내용
여성 복지	법률 제정 및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 제정,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li> <li>- 「남녀고용평등법」을 연령과 장애·인종·지역을 포괄하는 「고용차별금지법」으로 전환 검토</li> <li>- 호주제 폐지 <span style="float: right;">- 가족간호휴가제를 법제화</span></li> <li>-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li> <li>- 「성매매방지법」을 제정,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기구」를 마련</li> </ul>
	현금 급여 및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가정의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차등보육료제를 도입</li> <li>-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을 실시 <span style="float: right;">-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활성화</span></li> <li>-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li> <li>-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li> <li>- 여성의 직업교육 및 훈련기회 확대, 특별장학금 지급, 취업알선 및 진로상담, 인턴십 제도 등을 활성화</li> <li>- 유급교육 훈련휴가제 도입 등 재직여성노동자에게 지원을 확대</li> <li>-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때 전문 가정도우미를 파견</li> <li>- 여성노인의 취업지원, 기능전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li> <li>- 치매, 중풍 등 장기와병노인을 위한 방문 간호서비스를 확대</li> <li>- 임신부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 및 임부와 영유아에게 무료건강진단 실시</li> <li>- 태아검진휴가 및 유·사산 휴가제, 출산간호휴가제 등 모성보호 관련제도 도입</li> <li>-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의 출산시 소득보전에 대한 대책 마련</li> <li>-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가족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li> <li>-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확대</li> <li>- 합의이혼 시 배우자의 자녀부양의무를 명시</li> <li>- 가족간호휴가제 도입으로 직장·가정 양립을 지원</li> <li>- 육아휴직제 등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li> <li>-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li> <li>-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li> </ul>
	시설 확대 및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확대 및 운영 지원을 강화</li> <li>- 가출청소년녀를 위해 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자활을 지원</li> <li>- 성매매 피해자 및 탈성매매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및 상담소를 확대</li> <li>- 상담, 보육, 방과후 아동지도, 교육문화 등 다목적용 「여성농업인센터」를 확충</li> <li>-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li> <li>- 장애아 및 영아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li> <li>-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공동육아제도를 활성화</li> <li>- 평가인증제를 통해 우수보육시설을 지원</li> <li>- 여성창업보육센터의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li> </ul>

분야	구분	공약내용
여성 복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사회복지, 창업 분야 등에서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li> <li>-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양성제도 개편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li> <li>- 보육정보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li> <li>-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li> <li>- 여성장애인의 교육, 직업훈련 체계화 및 고용 확대 방안을 마련</li> <li>-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사회분담을 점차 확대</li> <li>- 미혼모 예방을 위한 실질적 성교육과 미혼모 지원 서비스를 확충</li> <li>- 여성특화직종 개발 및 교육지원을 확대 - 직장내 성희롱 규제를 강화</li> <li>- 공공 및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li> <li>- 채용목표제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시하여 민간기업으로 확대</li> <li>- 고용, 승진, 각종 직업훈련 등에 있어 여성 30% 할당제를 도입</li> <li>- 공적 보육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li> <li>-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을 폐지</li> </ul>

그리고 시설확대 및 기능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상담·보육·방과후 아동지도·교육문화사업 등 다목적용 여성농업인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아 및 영아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공동육아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 여성을 위한 고용 창출로서 IT·사회복지·창업 분야 등에서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하고, 공공 및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노무현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여성복지 서비스의 정책공약은 보육서비스 강화나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고용촉진을 위한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한가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은 보육사업이 여성분야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보육문제를 아동복지의 관점이 아닌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새정부는 3월 25일에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보육정책은 민간보육시설에 의존한 양적 공급의 확대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보육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이라는 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2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육사업의 정책 방향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보육사업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을 확정한 후에 그것을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단순히 대통령이나 장관의 의견만으로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한다고 해서 현재 보육정책이 지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으며,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사회복지서비스 공약에 대한 종합평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공약의 내용에 덧붙여 노무현대통령

의 주요발언들을 검토해 보면, 앞으로 5년간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질 변화의 흐름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정시키지 않고 전국민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장애인의 범주와 특수 교육에 관한 기준 재조정, 장애연금제도 도입, 학교사회사업제도의 전국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역할은 저소득층 또는 시장탈락자 중심의 한정적 보호에 머물러 왔으며, 일반 국민은 사회복지의 대상자로서 고려되지 못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일반 국민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은 복지국가의 진입을 위한 토대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가족과 시장 그리고 국가를 들 수 있는데, 국가가 중심이 되는 사회복지공급유형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평등의 목적을 보다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강화와 관련하여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참여복지'라는 정책이념이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즉, 참여복지는 문자의 의미로만 본다면 사회복지를 위해 국가와 민간영역이 모두 참여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노무현정부가 국가중심형 복지보다는 소위 복지다원주의라는 민간참여형 복지체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이 국정목표로서 교육·문화·복지의 공공성 확대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복지공약의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sup>10)</sup> 1980년대 서구에서 국가복지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시장에게 복지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복지다원주의와는 구분되는 것은 쉽게 드러난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비록 구체적인 참여형태가 공약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무현대통령의 국정목표로서 각종 정치과정과 정책결정에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과 제도를 바꾸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민참여는 인간욕구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에 잘 부합될 수 있으며, 행정의 관료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책공약의 내용과 대통령의 발언을 기초로 판단할 때, 부분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을 '적극적 복지전략'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이영환, 2003). 적극적 복지정책의 추진전략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을 고려할 때에 적절한 추진방향이라고 판단되며,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기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만하다.

10) 예를 들어 공적 노인요양 보호제도 도입, 장애연금제도 도입, 보육료 50% 국가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을 실시 등이다.

## 2) 정책과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새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공약들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참여복지의 실체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복지는 새정부가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 지향점(정책이념)을 압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새롭게 제시된 정책이념이 구체적인 공약들과 맞물려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의미가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참여복지의 실체가 불분명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DJ정부에서도 있었는데, DJ정부는 국가의 복지책임을 확대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친화적인 복지 혹은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로 해석되기 쉬운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참여복지 역시 용어 자체만을 본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와 친숙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크다. 아마도 이 용어는 노무현대통령이 강조하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와 사회복지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도 추측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민간의 복지참여를 강조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렇지만 노무현대통령의 공약내용을 보면 국가중심의 복지체제와 보편주의가 주요 지향점이라고 판단되며,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의 복지책임 강화라는 방향에서 정책이념의 재설정 또는 재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DJ정부 하에서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상당한 예산증가가 이루어졌는데, 노무현정부가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증대가 필요하다.

지난 5년간 보건복지예산의 추이를 <표 7>을 통해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제외)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국민연금 운영지원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예산은 2002년에 2조 8,38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37.2%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1998년에 비해 2.5배 증가한 규모이다. 그리고 의료보장을 포함한 보건예산은 4조 7,858억원으로 총사업비의 62.8%를 차지하였는데, 1998년에 비해 2.5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을 보면 2002년에 1조 332억원으로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서기는 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것을 1998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2.1배 증가한 것인데, 기초생활보장예산(3.0배)이나 의료보장예산(2.7배)의 증가정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7> 1998~2002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사업비 구성(단위 : 억원, %)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98년대 비증가
국가재정규모		807,629	884,850	949,199	1,052,801	1,119,767	1.4
-일반회계		755,829	836,852	887,363	991,801	1,058,767	1.4
-재특순세입		51,800	47,998	61,836	61,000	61,000	1.2
보건복지부예산(일반회계)		31,127	41,611	53,100	74,581	77,495	2.5
사업비		30,101 (100.0)	40,655 (100.0)	52,107 (100.0)	73,501 (100.0)	76,242 (100.0)	2.5
사 회 복 지 예 산	계	11,252 (37.4)	17,711 (43.6)	21,886 (42.0)	26,224 (35.7)	28,384 (37.2)	2.5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제외)	5,749 (19.1)	11,353 (27.9)	13,768 (26.4)	16,799 (22.9)	17,129 (22.5)	3.0
	-사회복지서비스	4,966(16.5)	5,629(13.9)	7,347(14.1)	8,574(11.6)	10,332 (13.5)	2.1
	-국민연금 운영지원	537(1.8)	729(1.8)	711(1.5)	878(1.2)	923(1.2)	1.7
보 건 예 산	계	18,849 (62.6)	22,944 (56.4)	30,221 (58.0)	47,277 (64.3)	47,858 (62.8)	2.5
	-의료보장	16,579 (55.1)	20,625 (50.7)	27,860 (53.5)	44,104 (60.0)	44,269 (58.1)	2.7
	-보건의료	2,270(7.5)	2,319(5.7)	2,361(4.5)	3,173(4.3)	3,589(4.7)	1.6

자료 :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각 연도.  
국회 예산정책국, 「예산안분석보고서」, 각 연도, 박인화(2002)에서 재인용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8>에 제시되어 있듯이 지난 수년간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가 사회복지서비스예산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와 보육사업 예산이 각각 20~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동복지와 여성복지의 1999년에 2분야를 모두 합하여 11.4%에서 2003년에 8.6%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볼 때 DJ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주요 대상이 저소득층 중심이고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국민전체를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가 빈약하다는 문제를 드러내었다. 특히 시설에서의 보호는 재활과 사회적응보다는 단순 수용보호에 머물고 있으며,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하였다. 또한 최근에 점차 문제로 되고 있는 가족해체와 가족기능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와 예산지원이 빈약하다는 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였다.

이처럼 DJ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노인·장애인·아동·여성 중에서도 사회취약 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새정부가 사회복지 수준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수준에서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노무현대통령이 내세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투자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정확히 추계한다

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산(概算)할 수 있다(이태수, 2003). 보육료 50% 지원에 연간 1조 6천억원, 장애수당의 확대에 연간 8천억원,11) 노인연금의 보편적 지급에 연간 1조 8천억원,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재활시설의 확충에 총 1조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에 총 2조원,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에 연간 3조원 등 노무현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의 '일부'를 실행하는 데에만 기존의 예산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약 10조원 정도의 정부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2003년도의 보건복지부 예산이 8조원, 사회보장전체예산이 15조원임을 생각할 때 새정부의 임기 말경에는 적어도 이의 2배 이상의 예산상태가 되어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밖에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수혜자의 자동적 확대와 건강보험재정의 증대 등 4대 사회보험 내실화를 통한 재원의 자동적인 확충을 비롯하여 노동시장정책의 확대 등을 생각할 때 새정부의 임기 말에는 적어도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비의 비중은 현재의 10% 선에서 15% 수준으로 상승되어야 할 것이다.

〈표 8〉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별 예산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5,629(100.0)	7,239(100.0)	8,574(100.0)	10,332(100.0)	11,878(100.0)
노인복지	1,956(34.7)	2,703(37.3)	2,997(35.1)	3,787(36.7)	3,903(32.9)
장애인복지	1,126(20.0)	1,476(20.4)	1,838(21.5)	2,326(22.5)	2,554(21.5)
보육사업	1,253(22.3)	1,460(20.2)	1,705(20.0)	2,102(20.4)	2,999(25.2)
아동복지	473( 8.4)	531( 7.3)	736( 8.6)	770( 7.5)	842( 7.1)
가정복지 <sup>1)</sup>	169( 3.0)	227( 3.1)	255( 3.0)	180( 1.7)	177( 1.5)
기타	652(11.6)	842(11.6)	1,013(11.8)	1,163(11.3)	1,400(11.8)

주: 1) 여성 및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을 말함.  
 자료 :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각 연도.

따라서 이러한 예산확보를 둘러싸고 새정부 임기동안 우리사회 내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는데, 예산 증대를 위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과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야 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DJ정부 동안에 적정 이상으로 복지재정이 팽창되었다고 보는 경제관료나 신자유주의적 학자들로 부터 상당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지국가수준으로의 제도 확충을 위해서는 앞에서 개산(概算)한 매년 최소한 10조원 정도의 지출규모로도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사회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목표와 가치는 사회복지법률이나 정책에 반영되며 이러한 법률이나 정책의 집행에 근거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이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의해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따라서 노무현정부가 적절한 조직구조와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만

11) 장애인연금제를 도입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16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약 2조원 이상이 소요됨.

들어야만 참여복지와 삶의질 향상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와 인력확충,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균형발전 대책 수립 등 전달체계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이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공공행정기관의 기획과 집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적정수준의 업무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사회복지관련기관들이 주민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물리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보인프라도 체계화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민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통계정보가 요구되는데, 현재에는 세부적인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정보가 새로운 복지제도나 서비스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문제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통계자료의 생산을 위한 투자는 부족하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통계인프라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참여복지계획의 수립과 정책방향 설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구조의 다양화와 인구의 고령화는 기존 수준에서의 제도적 접근으로는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 부양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방향의 전환을 통하여 시급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표자의 생각에는 '사회적 차별 해소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보편화'라는 기본방향<sup>12)</sup>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3가지 특징적 기능을 갖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기능, 비행이나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회통제의 기능,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활의 기능 등이 그것이다(Neugeborn, 1991; Marianne Woodside & Tricia McClam, 2002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보호, 사회통제, 재활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사회적 차별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복지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향에서 주요 대상자별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보면, 먼저 노인을 위해서는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연령통합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sup>13)</sup>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제공해 주는 것

12) 사회적 차별 해소는 취약계층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복지서비스의 보편화는 지금까지 일부 계층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온 사회복지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연령통합적 사회는 사회발전의 결과를 모든 연령층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정책과 제도가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단계인 청소년기와, 노동의 시기인 청년기, 은퇴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령 분리적

과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인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공적인 장기요양 보호제도의 구축,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노인복지기관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 가구에 대한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지지대책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녀와 동거 또는 단독가 구로 생활하거나 시설에서 보호받는 모든 노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에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을 도입하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원확대와 중증장애인 보호수당 지급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재활과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을 강화하고,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시설의 확대 및 서비스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

가족 및 아동과 관련해서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족의 보호기능의 강화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도입, 보육비 부담 완화,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과후 공부방의 확대, 육아휴직제의 보완, 연금제도의 성평등적 요소 강화,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 보장, 전문가족상담센터의 설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 및 고용지원, 재혼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공약사항의 하나인 각 분야별 참여복지 종합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한다. 이미 장애인 복지발전5개년계획이나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또는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등 일부 분야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옮겨지고 있는데, 복지국가의 진입을 이룩할 수 있도록 각 분야가 조화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평등과 진보를 이루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비전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접근방법과 전략을 담은 참여복지 종합계획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이것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에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결 론

지금까지 노무현대통령의 사회복지서비스 공약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정책공약은 지금까지의 정부에 비해 사회복지발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책공약은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정치적 수사로 단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항상 해석이 필요하다. 이것을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치적 수사로 표현되어 있는 선거공약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운동적 차원에서 선거공약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

인 사회에서 교육·노동·여가가 전생애에 걸쳐 균형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경희, 2003, p. 68.

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선거공약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여 그것을 실현되기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복지공약들을 제시하였으나,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제시한 것을 보면 고령화대책과 보육사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분야의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계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성천. 2001.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와 한국의 사회복지", 《비판사회복지학회 창립학술대회 자료집》, 비판사회복지학회 창립준비위원회, pp. 79~100.
- 김성희. 2003.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76호, pp. 75~86.
- 김승권. 2003. "2003년 복지서비스부문 예산분석",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75호, pp. 43~60.
- \_\_\_\_\_. 2001. "인구 및 가족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62호, pp. 16~30.
- 김연명 편. 2002.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I. 인간과복지.
- 박능후. 2003. "참여복지: 의의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76호, pp. 4~14.
- 박인화. 2002. "2002년도 보건복지예산 국회심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63호, pp. 48~60.
- 변용찬. 2002. "2002년 복지서비스분야 예산분석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63호, pp. 36~47.
- \_\_\_\_\_. 2001. "인구변동과 사회정책",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62호, pp. 5~15.
- \_\_\_\_\_. 외. 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 2003. "여성의 사회참여와 아동 보육의 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76호, pp. 87~97.
- 새천년민주당. 제16대 대통령선거정책공약 자료집.
- 송근원. 1995. "역대 대통령 후보들의 이슈 정향에 관한 연구:제5대·6대·7대·13대·14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4권 3호.
- 이영환. 2003. "새정부 보건복지정책 과제 : 이제는 복지국가다", 한겨레신문·참여연대 토론회자료집.
- 이태수. 2003. "새정부 복지정책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10주년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pp. 112~143.
- 정경희. 2003.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76호, pp. 64~74.
- \_\_\_\_\_. 2001. "인구고령화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62호, pp. 31~40.
- 정홍원. 2002. "대선 후보들의 분야별 사회복지 공약을 점검한다 - 사회보험 분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50호.
- 조영훈. 2002.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김연명 편.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I. 인간과복지, pp. 81~108.
- 통계청. 2001. 장래인구추계 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에 관한 토론회자료.
- 허범. 1997. "대통령선거정책공약의 설계를 위한 개념의 틀과 지도지침", 한국정책학회보 6권 2호.
- 허선. 2002. "대선 후보들의 분야별 사회복지 공약을 점검한다 - 기초생활보장 분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50호.
- Howard S. Harris & David C. Maloney. 1996. Human Services : contempory issues and trends, Boston: Allyn & Bacon.
- Marianne Woodside & Tricia McClarn. 2002. An Introduction To Human Services, CA: Brooks/Cole.
- Robert Adams. 1996. The Personal Social Services: Clients, Consumers or Citizens?, London: Longman.